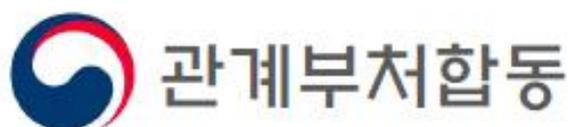

'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2025. 3.



||| 목 차 |||

I. 추진배경	1
II. 그간의 마약류 대응현황('22~'24) 및 보완점	3
1. 마약류 수사·단속	3
2.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7
3. 마약류 예방교육·홍보	9
III. '25년 시행계획 주요 과제	11
1.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12
2. 마약류 중독자 일상 회복 지원	16
3.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 기반 강화	18
4. 위험 취약요인별 맞춤형 관리 강화	20
IV. 향후 계획	23
[참 고] 주요 과제별 일정표	24

※ 별첨 : 기본계획 과제(189개)별 '25년 세부이행계획

I. 추진배경

- 마약류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함에 따라, 국민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정부는 그간 범정부 대책('23.4.11월)* 등을 통해 대응해 왔으나, 마약류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
 - *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치료·재활 전문기관 확대 등
- 정부는 '23년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최초로 중장기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5~'29) 수립
 - 4대 전략 189개 세부과제 마련,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기까지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체계 구축

전략	주요 과제
①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온라인 전담 수사팀 보강, 잠입수사 도입 • 처방 전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성분 확대, 셀프처방 금지
②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독상태별 맞춤형 치료, 중독치료 참여 확대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중증 중독자 재활을 위한 공동 입소시설(숙식형 한걸음센터) 설치
③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국민 장기 캠페인,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 운영 등 대국민 홍보 확대 • 학생·가정·군인 등 교육 대상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시
④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 투약사범 치료보호 의무화, 미성년자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 마련 • 교정시설 내 범죄학습 적발시 제재, 입영 자원 마약류 검사 선제 실시

-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마약류 관련 중요 현안들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수립

'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수립 경과

- 시행기관 대상 수립지침 안내(주관기관, '25.1월)
- 동 지침에 따라 기관별 시행계획을 주관기관에 제출(시행기관, ~'25.1월)
- 국조실 중심으로 기관별 세부 과제 협의·조정('25.2월)
- 민생범죄 점검회의(대통령 권한대행)를 통해 주요 과제 점검('25.3월)
-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시행계획 최종 확정('25.3월)

< 참고 : 제1차 기본계획 추진 체계도 >



Ⅱ. 그간의 마약류 대응현황('22~'24) 및 보완점

1. 마약류 수사·단속

1 불법 마약류

(1) 추진현황

- 마약류 수사·단속 컨트롤타워로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23.4), 수사 정보공유·공동대응 등 기관 간 수사 역량 결집

* 검·경·관세·해경·국방·국정원 등 총 974명(공동본부장 : 검찰마약조직범죄부장 - 경찰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 수사·단속 대응 강화를 위한 기관별 전담조직 확대

- (검찰) 4개청(서울·인천·부산·광주)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설치('22.11), 마약 밀수·의료용 마약류·비대면 마약유통 등 집중 수사
- (경찰) 쏘 시도청에 다크웹 전문수사팀 설치('23.1~), 비대면 마약유통 대응
- (관세) 마약밀수 특별대책추진단 설치('23.11), 통관감시·밀수조사·첨단장비 지원 등 대응

- 국경단계 밀반입 차단을 위해 주요 경로별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정보협력·공조수사 등 국제공조 확대

통관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전국 주요 공항만 16대)·열화상카메라(인천공항 2대) 도입▶마약 의심물품에 대한 적극적 개장·파괴검사 실시
국제공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대검)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등을 통한 정보협력 태국에 마약 수사관 파견을 통한 현지 공조수사▶(경찰) 국제마약수사컨퍼런스(ICON) 개최 및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 발족('24.9) 등을 통한 경찰간 수사정보 교류▶인터폴과 마약(MAYAG)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현지 합동작전 실시▶(해경) 콜롬비아 해군 주관 '오리온 캠페인' 현지 훈련 참여('24)▶(관세) 태국·베트남·네덜란드·미국·아세안 회원국과 합동단속 실시

- 온라인상 불법 마약거래·유통을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온라인 등에 게시된 마약류 광고 게시글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 거래·광고 포착시 방심위 심의를 통해 차단

* (대검) e-drug 모니터링 시스템, (식약) 온라인 식·의약 모니터링 시스템

(2) 평가 및 보완점



□ 마약류 사범은 '15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3년 최초로 2만명 돌파** (**'24년은 전년 대비 16%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2만명 상회)

○ 최근 20·30대 등 **젊은 층***, **외국인** 중심으로 **증가 추세**

* 10~30대 비중은 '20년 50% 돌파 후 50%대를 유지하다가 '24년 최초로 60% 돌파

○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해서는 **비대면 거래**, **점조직 형태 운영** 등 최근 변화하고 있는 **마약 거래·유통 방식**에 대한 **총력 대응** 필요

*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대비 인터넷 마약사범 비중 (경찰 검거인원 기준)

: ('20) 21.4 → ('21) 24.0 → ('22) 25.0 → ('23) 25.3 → ('24) **31.6%**

□ **불법 마약류 압수량**은 **3년간 지속 증가**하였으며, 이 중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대다수*를 차지

* 전체 압수량 중 향정신성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 : ('22) 77 → ('23) 83 → ('24) 77%

○ 국경단계에서 적발된 **밀수량** 역시 **3년간 지속 증가***하였으며, 유입경로는 **특송화물**(892kg) > **국제우편**(879kg) > **여행자**(324kg) 順

* ('22) 624 → ('23) 769 → ('24) 787kg

○ 국경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약류 밀수기법도 **지능화***되고 있어, 단속 적발률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단속방식** **긴요**

* 일반 판매제품 활용, 마약류 액체화 등 마약류 은닉수법 고도화

⇒ **지능화된 마약류 범죄, 다양한 밀수경로** 등을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 보강**과 함께 **첨단장비·기법** 등 **수사·단속 역량 강화**

2 의료용 마약류

(1) 추진현황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감독 및 신속 대응을 위한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 운영('23.4~, 10명)

-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검·경, 지자체 등) 지속 실시

구분(개소)	'22년	'23년	'24년 11월	합계
점검대상	196	170	228	594
수사의뢰(고발)	89	69	91	249

□ 의료용 마약류 처방 소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처방전) 의료용 마약류 적정 처방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및 취급·사용 정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기준** 마련('22)

* 국내 허가된 모든 의료용 마약류(49개 성분)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 제정('24.6)

** 식욕억제제(4개 성분), 진통제(12개 성분), 항불안제(10개 성분)

-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성분에 대한 처방 기간·대상 및 사용량의 기준 제시('24.9)

- (처방시) 명의도용 금지를 위해 환자 본인확인을 의무화('24.5~)하고, 펜타닐 처방시 환자의 기존 투약이력을 반드시 확인('24.6~)

- (처방후)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 대해 추적 관리

* 처방내역을 알림톡(모바일)으로 제공(연 6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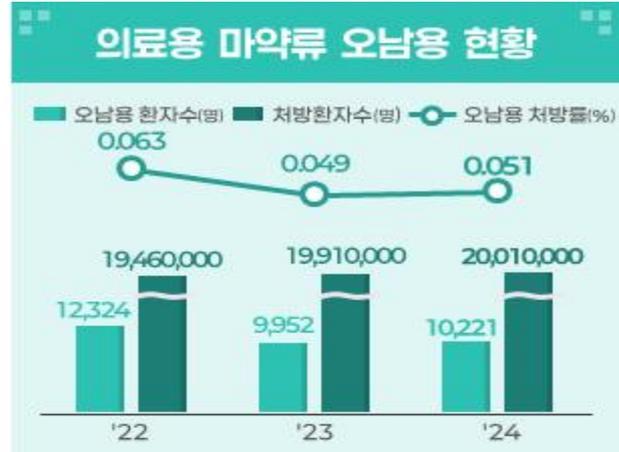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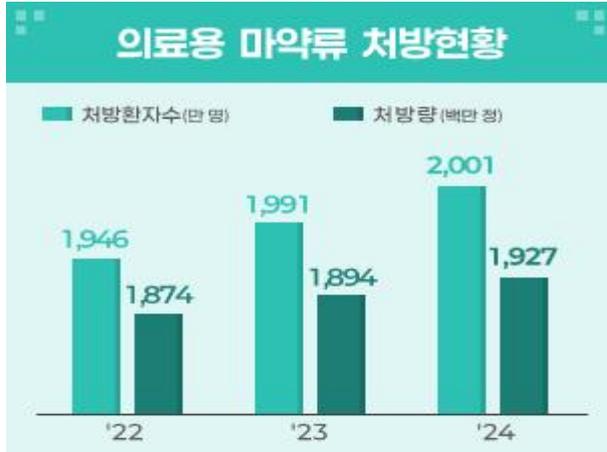
** 빅데이터 처방분석을 통해 오남용 의심시 정보제공(사전알리미) 및 추적관찰 → 의학적 타당성이 없음에도, 처방개선이 없는 경우 행정조치 가능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하기 위한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 구축 추진('24~'26)

- 마약류 처방 데이터 등을 AI가 분석, 중복·과다처방, 셀프처방 등 의심사례 자동 추출·분석 및 탐지 모델 개발

※ 오남용 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공공정보 연계(~'25)

(2) 평가 및 보완점



□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수와 처방량은 3년간 꾸준히 증가

- 펜타닐 등 진통제 처방량은 '22년 대비 9.5% 감소한 반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는 58.4% 증가

* 진통제 : ('22) 80.9 → ('23) 76.9 → ('24) 73.2백만 정
 메틸페니데이트 : ('22) 57.0 → ('23) 73.1 → ('24) 90.2백만 정

- 특히, ADHD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인식,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이 증가하는 등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상황

* 국정원·경찰 조사결과('24.7~9), 텔레그램 등 37개의 SNS에서 ADHD 치료제 거래방 발견, 본인 복용을 위해 약을 처방받은 후 일부를 불법거래한 사실 적발

※ 마약류 사용 위험성에 대한 인식 조사('23, 식약처)

- (성인) '알고 있다' 63.5%, '보통이다' 24.6%, '알지 못한다' 11.9%
- (청소년) '알고 있다' 67.6%, '보통이다' 20.3%, '알지 못한다' 12.1%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 결과, 전체 처방량 대비 오남용 처방건수는 감소

- 다만, 파손·도난·분실 등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쇼핑·셀프 처방 등 불법 유통사례도 지속 발생

* '22년 3,405건 → '23년 3,884건 → '24년 3,910건

⇒ 마약류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환자가 필요한 경우만 처방·투약 받도록 하는 등 철저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정보제공 확대

2.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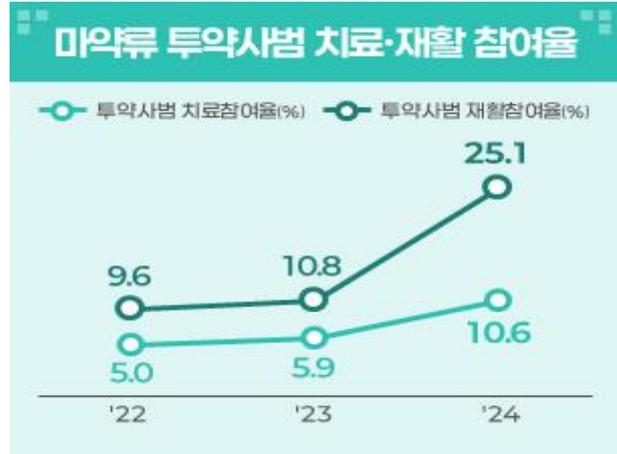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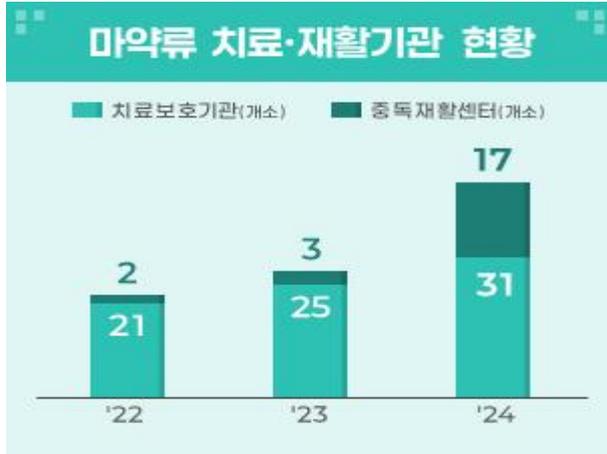
(1) 추진현황

-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재활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24.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전문 치료·재활기관 인프라 확대를 통한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치료) 치료보호기관을 지속 확충*하고, 이 중 거점 역할을 하는 권역별 치료보호기관(9개) 지정·운영('24)
 - * '22년 21개 → '23년 25개 → '24년 31개
 - (재활) 마약에 특화된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함께한걸음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17개, '23~'24)
 - 국민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마약류 관련 재활 상담이 가능하도록 24시간 전화상담센터(*기한걸음센터, 1342) 설치·운영('24.3~)
 - * '24년 4,502건에 대한 전화상담 대응

- 적시에 원활한 중독 치료·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 마련
 -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에도 건강보험 적용('24.7.5~)
 - * (기존) 마약류 치료보호는 전액 비급여 → (변경) 건강보험(약 70%), 예산지원(약 30%)
 - 권역별 치료보호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실시('24~)
 - * 운영비(기관별 1억원), 환경개선금(5억원), 성과보상금(3억원)
 - 사회재활 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인증제 운영('24.9~)
 - * 이론·현장실습을 거쳐 평가를 통과한 사람에 대해 식약처장이 사회재활 상담사로 인증
 - 성실히 치료·재활을 임한 기소유예자에 한해 처분을 종료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실시('24.4~) ※ 시범사업('23.6~11)
 - * 기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유형(선도, 치료, 교육) 외 추가

(2) 평가 및 보완점



- 전문 치료·재활기관은 3년간 2배 이상 확대 되었으며, 시·도별로 지역 내에서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중
 - 다만, 현재까지는 지역 내 접근성(특히, 도 단위)이 낮아 기관 방문을 지속하는데 한계가 있어, 단계적으로 인프라를 확대할 필요

구분	지역별 개소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치료 재 활	치료보호기관(31개소)															
	2	2	2	2	1	2	1	7	2	1	1	3	1	1	2	1
	함께한걸음센터(17개소)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60개소)															
	3	3	2	5	5	5	2	10	4	2	2	4	2	2	6	3

- 마약류 투약사범 중 중독 치료·재활 참여율은 3년간 각각 2.1배, 2.6배 증가 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대비 낮은 비중 차지
 - 투약사범 증가 등에 따라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제반 여건 개선 필요
 - * 예) (치료) 치료보호기관 31개소 중 2개 기관에서 전체 실적의 74.2% 차지('24)
(재활) 중독자 스스로 방문·참여해야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처벌이 종료된 마약류 사범, 단순 투약자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음지에 있는 마약류 중독자들이 완전한 일상회복 전까지 전문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3. 마약류 예방교육 · 홍보

(1) 추진현황

□ 청소년, 대학생 등 청년층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 학교 내 연간 5~7시간 마약류 예방교육 의무화(‘24~)

* 초등학교 5시간, 중학교 6시간, 고등학교 7시간 (‘학교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

○ 학교 내, 학교 밖 청소년(지역아동센터, 꿈키움센터) 대상으로 **강의식 교육**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교육극 등 **체험형 교육** 실시

- **메타버스*·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23.12~)

* 정보 전시관·상담실·체험관 등으로 구성된 ‘마약청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23.12)

○ 10개 대학*에 마약 예방 서포터즈 구성, 대학생·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캠페인 등 마약류 예방활동** 실시(‘24.8~)

* 강원대, 고려대, 을지대, 전북대, 조선대, 중앙대, 총신대, 충남대, 한국외대, 한동대

** 전문가·회복자 특강(21회), 대학축제시 마약 예방부스(10회), 마약류 예방 캠페인(22회), 마약 근절 서약서(2,478명), 슷폼·카드뉴스 등 디지털 홍보(73개 게시물)

□ 마약류 인식 제고를 위해 계기시 대국민 캠페인 실시, 집중 홍보

* 예) ‘NO EXIT’(‘23.4~12, 경찰청): 국무총리 등 7천여명 참여, 폐북·인스타 ‘좋아요’ 약 80여만개

‘BE Brave’(‘24.7~9, 식약처): 무경험자·초기경험자·중독자(3편) 영상 송출(유튜브530만회·인스타1,339만회)

□ 시·공간 제약 없이 마약류 예방교육을 상시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통합 플랫폼(마약청정 대한민국) 구축·운영(‘23.12~)

* 부처별 정책, 교육자료 등 마약류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

□ 교원·강사 등 전문성 강화를 통한 예방교육 질적 수준 제고

○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개설·운영(‘23.5~) 및 **마약류 예방 교육 강사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인증제도**** 운영(‘24.9~)

*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각 시도교육청 연수원 등 원격 연수, 마퇴본부 협업 대면 연수과정 등

** 이론·현장실습·인증시험 평가 등을 포함한 전문 교육과정 운영 후 인증(식약처장)

(2) 평가 및 보완점



- 범정부적으로 마약류 예방교육을 적극 실시한 결과, 예방교육을 받은 인원은 3년간 6배 이상* 증가

* 초·중·고등학생(3.8배), 성인(21.7배), 다문화·학교밖 청소년 등 교육 취약계층(4.9배) 등

- 학교 교사·예방교육 강사들은 현실에 맞게 교육자료를 구체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기

※ 학교교사 및 예방교육 강사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실태조사 결과('24, 식약처)

- (애로사항) 교육 관련 자료 부족(45.7%), 교육시간 확보의 어려움(22.1%) 등
- (개선 필요사항) 현실을 반영한 교육자료(52.0%), 전문가 초빙을 통한 교육연수(22.2%) 등
- (효과적인 교육방법) 시청각 자료 활용(43.9%), 사례연구(22.1%), 상황 시뮬레이션(15.3%) 등

- 일상 속 마약류 확산으로 마약류 노출 대상·상황이 다양해진 만큼, 대상별 특징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필요

- 부처별로 마약류 예방을 위해 영상·캠페인·카드뉴스 등 다각도로 대국민 홍보를 추진중

- 마약류 위험성에 대해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핵심 메시지 발굴과 함께 미디어·정책대상 특성에 맞는 콘텐츠 차별화 필요

⇒ 예방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전문강사 등을 보완하는 한편, 마약류 관련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전략적으로 홍보

Ⅲ. '25년 시행계획 주요 과제

2025 중점 추진과제

전략	주요 과제 내용
1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2회(반기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실시 온라인 유통·판매채널 단속을 위한 온라인 수사팀 운영(3월) 온라인 불법 거래·광고에 대해 AI 기반 상시 감시(하반기) 철단장비·시설 보강을 통한 국경단속 강화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대상 및 셀프처방 금지대상 확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투약이력 확인(12월)
2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걸음센터(17개)에서 방문상담(7월), 중독관리 대상 조기발굴 치료보호 종료 이후 재활기관으로 연계 강화(2월)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운영(3분기) 한걸음센터(17개)에서 중독자 가족 대상 회복 지원 프로그램 실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적용대상 확대('24160→'25300명)
3 예방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교 내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 확대 운영('2410→'2520개 대학)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확대('24176→'25215만명)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7월)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12월) 하수역학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 및 방식 개선
4 위험 취약요인별 맞춤형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종 마약류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지정·관리 수요 예측량 사전에 산출, 필요한 환자에게만 공급(식육역제제부터 시행) 미성년자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 마련(12월) 대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가이드라인 마련·배포(9월)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입국금지기간 상향 적용(1월) 병역·입영판정검사시 마약류 검사 실시(각 1천명, 15만명 예상)

1.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현장 단속 확대

- 공·항만,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유입 취약지역에 대한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실시
 - 특별단속기간과 별개로 마약류 유입 취약시기*에 대해서는 수사·단속 기관별 집중 단속활동 전개
 - * 신학기(3~4월), 양귀비 개화대마 수확기(4~7월), 여름휴가철(6~8월), 연말 유흥객 증가기(10~12월)
- 검찰·관세 검찰-세관 합동분석팀(PRO-APIS, '24.12 신설)을 통해 기관 간 실시간 정보 연계*, 마약류 밀수입 단속에 적극 활용
 - * 마약범죄 전력자 관련 정보 공유 → 의심자의 수하물·소지품을 우선 집중검사
- 검찰·우본·관세 전국 배송 전 거치는 우편집중국에 마약류 검색시스템을 최초로 구축(12월, 추후 단계적 확대)
 - * 마약류 등 우편금지물품 적발시 수사기관에 인계
- 검찰 디지털 증거 삭제·인멸 방지를 위해 마약사범 검거 현장에서 증거 채증·분석이 가능한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 도입(6월)
 - 방대한 양의 증거자료들을 교차분석하기 위한 첨단 증거분석 프로그램 도입(6월)
- 경찰·해경 약물운전(운항) 의심자에 대한 마약류 검사 근거 및 검사 불응시 처벌 근거규정 마련
 - * 도로교통법(기발의), 해상교통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등 개정
- 검찰 약물검사 결과 조작 차단을 위한 소변 유효성 검사법*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12월)
 - * 크레아티닌(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설되는 물질) 농도 측정을 통해 비정상 소변 여부 판별

□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 **경찰**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3월), 텔레그램·가상자산 거래소 등 온라인 유통·판매채널에 대한 단속 강화
 - * 예) 마약 거래대금, 범죄수익금 세탁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무등록 가상자산 거래소' 단속
- 해외 국가기관 경우 없이 해외 IT 기업에게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확보할 수 있는 공조체계 구축
 - * 텔레그램사와 공식 협력체계 구축('24.10)
- **검찰** 수원·대구지검 마약 전담검사 및 수사관을 '온라인 마약유통 전담 수사팀'으로 편성·개편(6월)
 - * 현재 수원지검 형사3부,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에서 마약 수사전담
 - ※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내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통해 온라인 마약유통 범죄 전문 수사
- **경찰** 법률·범죄수사학·현장 전문가 등 외부 자문단(단장 : 경찰청 형사국장) 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위장수사 제도* 마련
 - * 위장수사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요건·절차와 함께 부작용 차단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 ※ 현재 발의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심사시 수사현장 의견이 보완되도록 협의 추진
- 온라인상 불법 거래·광고에 대한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 **검찰** 텔레그램·다크웹 정보 수집에 특화된 프로그램 도입, 1.3만개 채널의 불법 거래정보 실시간 감시(6월)
 - **식약** SNS 등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를 실시간으로 자동 검색, 판매성향이 있는 게시물 적발('AI 캡스', 하반기)
- **경찰** 가상자산 전문업체 협업*을 통해 암호화된 거래내역 분석 및 가상자산 흐름 도식화 등 수사 전문성 향상
 - *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자금세탁 추적 등 전문업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활용
- **검찰** 가상자산 추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 **검찰**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이용계좌 확인 후 지급정지 요청시, 금융회사가 계좌 출금 정지

-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개정

- **검찰** 마약류 범죄 수사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지원 확대

-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협조시 형벌감면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개정

- 마약류 범죄 신고·고발·검거자에 대해 발각 여부를 불문하고, 보상금 지급(상한액 5천 → 3억으로 상향)이 가능하도록 개선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6월),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개정(2월)

□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한 국경단속 및 국제공조 확대

- **관세**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침단 통관감시 장비* 확대

- * 여행자 신변검색기(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2대, 열화상카메라 15대), 이온스캐너 8대, 라만분광기 4대

- **관세** 대형화물 검색을 위한 컨테이너 검사센터 구축(12월, 부산신항)

- * 국내 최초로 혼합방식 기술 도입(고정형 양방향(투과) + 후방산란(2면 이상))

- **관세** 여행객 외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도 AI 기술을 활용하여 고위험 물품을 선별*할 수 있는 모델 개발(12월, '26년부터 현장 적용)

- * 수·발신인 마약류 범죄 이력, 배송경로 등 우편물 주요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

- **해경** 수중드론(5개 지방청 도입)을 활용하여 마약 우범국 입·출항 선박 대상으로 선저검색 등 확대 실시(7월~)

- 브리프캠 도입(5개 지방청)으로 CCTV 영상분석 시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수사 신속성 확보

- * 30분 분량 영상을 53초로 요약(1주일 분량을 7시간 만에 분석)

- **검찰** 주요 마약류 유입국인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3개국에 검찰 마약수사관을 파견하여 현지 공조수사 추진

- **경찰** 다국적 마약 밀수조직 해체를 위한 인터폴 합동 공조작전 등 추진
 - * '24년 동남아 → '25년 미주·유럽 등 주요 마약 유입국으로 작전 대상 지역·목표 확대
 - ※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 활용, 국내외 동시 연계수사 병행
- 최신 마약류 범죄 동향 파악 및 국가간 공동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가 주관하는 국제회의체 역할 확대**
 - **검찰**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9월, ADLOMICO) 참석규모 및 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회원국에 대한 지원 확대*
 - * 베트남, 캄보디아 대상으로 마약퇴치지원사업(마약수사 장비 지원 등) 실시(5, 11월)
 - **해경** 해양 마약범죄수사 국제컨퍼런스' 개최(7월), 외국선박에 대한 임검·체포·수사 등 해양 마약류 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 * 아세안·아태지역 13개국, 인터폴 등 국제기구, 국내기관 등 100여명
- **해경** 콜롬비아 해군 주관 '오리온 캠페인' 현지 훈련 참여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식약**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24년 펜타닐 → '25년 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 등)
 - *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투약내역 확인 성분·제형 확대 논의(4월~)
- **식약** 의사가 셀프처방 금지 대상 확대(2월 프로포폴 → 타 마취제로 단계적 확대*)
 - *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셀프처방 금지 성분 확대를 위한 협의 추진(12월)
- **식약** 식욕억제제에 대한 수요 예측량을 사전에 산출하여, 제조·수입량 배정 추진(9월~)
- **식약** 환자가 개별적으로 검색해야 했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도록 개선(12월)
 - '마약청정 대한민국' 누리집 내 의료용 마약류 정보센터 개설, 의료용 마약류 사용시 주의사항, 부작용 등에 대해 상시 확인(11월)

2.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기관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식약** 마약류 중독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전국 한걸음센터(17개)에서 방문상담 실시(7월~)
 - * 소년원, 교정시설, 청소년쉼터, 정신재활시설 등
- **식약** 24시간 전화상담(1342, ^{용기}한걸음센터)으로 발굴된 집중관리 필요 대상은 중독수준 등에 따라 ^{함께}한걸음센터 등 재활기관으로 신속 연계
- **복지** 중독 재활 수요, 중독자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개소 확대(서울 강남구·경기 용인시·경북 안동시)
- **식약** 마약류 투약·중독자가 입소하여 밀착관리 받을 수 있는 숙식형 한걸음센터 설치에 대한 타당성 연구 실시(~12월)
- **복지** 마약류 중독 여부를 신속히 판별하기 위해 검사기준* 완화(2월)
 - * (기존) ①소변 또는 모발검사, ②전문의 상담 및 심리검사 → ① and ②
(개선) ①소변 또는 모발검사, ②전문의 상담 또는 진단(심리검사 삭제) → ① or ②

□ 중독치료·재활 서비스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 개선

- **복지**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참여 확대를 위해 치료보호 종료 이후 재활기관으로 연계 강화(2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
 - *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치료보호 종료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함께한걸음센터 등에 치료보호 종료사실을 통보
- **식약·복지** 수요자가 지역여건·기관 간 서비스 등 비교 후 재활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함으로써 재활 인프라 효율적 연계
 - * ^{함께}한걸음센터(17개소) - 마약류 단일 중독 및 마약류 투약사범 사회재활 지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60개소) - 마약류와 타 중독(알코올, 도박 등)을 동반하는 대상자 재활지원
- **식약** 전담 상담사, 지역 유관기관(보건소 등) 등을 통해 사회재활 종료 이후에도 단약 여부를 주기적으로 사후관리(9월, 매뉴얼 마련)

□ 중독 치료·재활 역량 확충을 통한 서비스 내실화

- **복지** 치료 난이도가 높은 마약류 중독치료의 적정 수준 보상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 계획안 마련(하반기)
- **복지** 마약류 중독 응급환자가 적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운영(4분기)
 - * 정신응급 현장대응반(경찰,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 등)에게 환자 상태에 맞는 의료기관별 여유병상 정보제공(의료기관에서 병상정보 등 입력 → 시스템 조회)
- **식약** 마약류 중독자 가족을 위한 회복 지원 프로그램 전국 확대
(’24년 서울 → ’25년 전국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실시)
- **식약**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양성 확대(’24년 88명 → ’25년 300명(누적) 목표)

□ 재범 방지를 위한 마약류 사범에 대한 중독관리 강화

- **식약·대검·법무·복지** 기소유예자 중 투약사범에 대한 ‘사범-치료-재활 연계 모델’* 적용 확대 (’24년 160명 → ’25년 300명 목표)
 - * 절차 : 사전상담평가(식약처) → 전문가위원회 의견 제시(식약처) →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검찰) → 보호관찰 및 치료·사회재활 실시(법무부, 복지부, 식약처)
- **법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수시·불시 약물검사를 강화하고, 중독 증세가 심한 대상자는 전문가 심리상담* 확대
 - * 의사·교수·중독관리센터장 등 지역사회 중독치료 전문가풀 구성·운영
- **복지·법무** 추가 치료가 필요한 출소자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 하에 치료 보호기관으로 의뢰(2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
 - * 기존에는 교정시설 장이 시·도지사에게 통보 + 중독자에게 치료보호 안내
- **법무** 전담교정시설*에 있는 마약사범들이 출소 이후 즉시 재활 받을 수 있도록 거주지 내 함께한걸음센터 사례관리 사전등록 안내(4월)
 - * 화성직훈(교), 부산(교), 청주여(교), 광주(교)

3.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 기반 강화

□ 마약류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확대

- **식약·교육** 대학교 내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를 구성·운영(**20개 대학**)하여 대학생·유학생의 자발적인 예방교육 활동 지원(3월~)
 - 예방부스 운영, 캠페인, 전문가 교육, SNS 등 예방교육·활동 실시
 - * 각 대학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마약류 예방교육 프로그램 중 우수사례 발굴, 타 대학에 확산
- **식약** **지역 대표 축제·행사** 등에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를 활용하여 **체험형 교육부스** 또는 **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 **문체** 마약 근절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국민 캠페인 영상 제작**

□ 청소년·청년층 등 대상별 예방교육 강화

- **식약** **청소년·대학생·직장인 등** 예방교육을 전년 대비 **15% 확대** ('24년 32,150회 → '25년 37,090회)
 - * 교육부 학생안전교육 프로그램 등과 연계, 전문 예방교육 강사가 교육 실시
- **교육** 학교의 급별(초·중·고)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한 **교원용 교육 표준 지도서** 개발·보급(1월·7월)
 - 교직원 특성을 고려한 원격 연수과정(상시 운영)을 개발하는 한편, 대면 연수과정도 정례적으로 운영 추진
- **식약** 대학생 등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7월)하고, 중독시 폐해·위기 상황별 대응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
 - 학교밖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시설(보육원), 국내 체류 외국인 등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배포
 - 청소년, 대학생 등을 위한 마약류 예방교육 영상 콘텐츠 제작, '마약청정 대한민국' 등을 통해 상시 교육

□ 데이터·현장 중심 대책 수립을 위한 기반 강화

- **식약** 마약류 불법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12월)
 - 관계기관 공공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관련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수집·분석
 - * 주민등록·사망말소정보(행안부), 출입국내역(법무부), 의사대진(휴진·출국) 신고(심평원)
- **식약** 마약류 하수역학 조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사방식 개선
 - 전국 하수종말처리장(34개소) 외 **검출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추가 정밀조사* 실시
 - * 상류 배수분구 및 유흥시설 등 연계지점에 대한 추가 시료채취 및 분석 실시
- **식약** 국내 마약류 종류별 처벌규정의 정합성 조사 및 정비 추진
 - * 적정성 검토(2월~) 및 전문가 의견조회(4월) → 필요시 법령개정 추진
- **식약** 검출빈도가 높은 암페타민 계열에 대해 저비용·고효율로 검출할 수 있는 신속 검사키트* 개발
 - * 마약류 대사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단백질을 활용한 키트

□ 정책 거버넌스 및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 **국조·식약** 중앙-지방간 정책연계 강화를 위해 마약류대책협의회에 부처 및 지자체 참석 확대(하반기)
- **국조·식약** 마약류 예방·홍보 및 중독자 사회재활 관련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표준 조례 개정(안) 마련(11월)
- **대검·경찰** 몽골·키르기스스탄 대상 국제마약퇴치 지원(ODA) 실시(3~10월)
 - * ▲몽골 : 마약범죄 대응 역량강화 교육 및 기자재 지원 등
 - ▲키르기스스탄 : 마약 수사장비 지원, 초청연수 및 현지 워크숍 개최 등

4. 위험 취약요인별 맞춤형 관리 강화

□ 펜타닐 등 합성마약에 대한 대응 강화

- 대검·관세·식약·국과수 국제기구 등과 정보협력을 통한 최신 국제동향 상시 파악
 -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유럽약품중독감시센터(EUDA), 포렌식과학교육연구센터(CFSRE), 美 DEA(마약단속청)·HSI(국토안보수사국) 등
- 신종 합성마약에 조기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식약·국과수 국내 유입 우려 성분에 대한 표준품 선제 확보·분석
 - 식약 현재의 임시마약류 구분 및 지정기한(3년) 폐지, 신종 마약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지정·공고하여 관리(안전성·유효성 등 입증시 해제)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3월) 및 개정 추진
 - 식약 식품 내 불법 혼입된 200여종 마약류를 동시 분석기술 개발(12월)
 - * 마약성분이 확인될 경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지정·공고(26~)
 - 국과수 고해상도 질량분석기 등을 통해 획득한 마약류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에 AI 기술을 접목, 신종 마약류 탐색·예측에 활용(11월~)
- 관세 주요 마약류 유입국 發 여행자가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핸드 캐리 수하물 및 신변 전수검사 실시(1월~, 주 1~2회 인천공항(T1))
- 대검 국내 마약제조 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제조 공범, 원료물질 등)
- 식약 합성마약이면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약물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 수요 예측량을 사전에 산출(식육억제제부터 시행), 실제 치료를 위해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공급(제조·수입 배정량 통제)
 - 오남용 우려 기관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경찰·지자체 등 포함)
 - 미성년자 중독 예방을 위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 마련(12월)
 - * 연구사업 실시(9월) → 전문가 협의(11월) →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12월)
- 식약 불법 마약류(합성마약류 포함)에 대한 전문 재활프로그램 개발·운영
- 식약·대검 합성마약의 위험성, 불법 제조·유통 투약시 처벌기준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대상별 마약류 중독 방지를 위한 맞춤형 예방관리

(1) 청년

- 식약 AI 기반 온라인 모니터링시스템(AI 캡스), 여가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내 불법·유해정보 상시 점검
 - *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내 설치(100명 규모)
- 식약·여가·대검 기관 간 사전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해 불법 판매자 특정시 신속히 수사 실시
 - * 식약처·여가부에서 주기적으로 온라인 마약류 불법 유통자료, 심층 분석자료 등을 대검찰청에 공유 → 대검찰청에서 수사연계 가능한 사례 선별 후 조치
- 식약 전국 복지시설·소년원 등 함께한걸음센터 방문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중독상담' 실시(7월)
- 식약 현재 대전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운영중인 청소년 재활 프로그램 (요리, 미술프로그램 등)을 전국적으로 확대(7월~)
- 여가·식약 치료·재활을 마친 청소년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상담·심리서비스 등 제공(1월)
 - * 대전 지역 시범사업 운영 후 단계별 확대 검토
- 식약 청소년용 VR 콘텐츠를 신규 개발(2월)하고, '마약청정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개시(3월~)
- 여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전국 222개)에서 기초소양교육 운영시 마약류 예방교육 의무화(1월)
- 식약·교육 대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대학에 배포(9월)
- 교육 대학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집단연수 행사시 마약류 중독예방 교육을 포함하도록 권고(1월,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 개정)

(2) 외국인

- **법무** 근로자·기술연수생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국내로 마약을 유입하는 일이 없도록 **사증심사 필수 제출서류***에 대한 **위변조 검증 강화**
 - *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 마약검사 확인서
기술연수생(D-3) 등 : 건강검진 서류 제출
- **법무** 마약류 범죄로 국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해 **입국금지기간 상향 적용**
 - * 벌금형 이상 마약사범, 마약류 소지 입국불허자 등
- **법무** 유학·취업 등 **사증발급시** 마약 예방교육 이수 권고
 - * 유학생은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단계에서 예방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권고
- **법무·교육·고용·식약** 외국인 유학생·근로자 등을 위한 **다국어 안내자료** 제작 (마약류 관련 국내 법령 등), 출입국관리사무소·대학 등을 통해 배포(7월~)
- **법무** 외국인 유학생 **조기적응프로그램***에 마약류 범죄 예방교육 신설(2월)
 - * 조기적응지원센터로 지정된 대학 41개

(3) 수용자·군인

- **법무** 교정시설 내 **모든 수용자** 대상으로 **물질중독예방교육** 실시(1월~)
 - * 물질중독의 정의 및 폐해, 치료 및 회복과정, 지역사회 치료기관 소개 등
- **병무** **병역·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실시
(1차 : 간이검사 키트, 2차 : 정밀검사 → 최종 양성 판정시 지방경찰청에 명단 통보)
 - * ▲(병역판정)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거나, 병역판정 전담의사·임상 심리사가 검사 필요성 인정시 ('25년 약 1천명 예상) ▲(입영판정)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25년 약 13만명 예상)
- **국방** **임관** 및 **장기복무 지원 간부**(약 3만명)에 대해 신체검사시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검사** 시행

IV. 향후계획

□ 과제 점검·관리

-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업 하 속도감 있게 추진
- 총리실은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주기적(분기별) 점검을 통해 과제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
 - 신속 대응이 필요한 현안 발생시, 기존 일정 대비 조기 달성 가능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거쳐 속도감 있게 추진
 - 지연과제는 지연사유 분석 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 등 보완방안 마련

□ 현안 발생에 대한 적기 대응

- 국민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이슈 발생시,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대응계획을 신속히 점검
- 범정부적인 대응 필요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협의·조정

□ 신규 과제 발굴·개선

- 현장방문·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 기존 시행계획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발굴
- 해외사례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 후 '26년도 시행계획에 반영

*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주관부처 중심으로 '25년 내 우선 추진

참 고 시행계획 주요 과제별 일정표

과제명 (85개) * 기본계획 189개 과제	추진 일정				소관 부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략1]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28개}					
1.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현장 단속 확대^{8개}					
1)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실시					대검, 경찰, 관세, 해경
2) 유입 취약시기 기관별 집중 단속활동 전개					대검, 경찰, 관세, 해경
3) 검찰-세관 합동분석팀 운영을 통한 상시 정보 연계					대검, 관세
4) 우편집중국(동서울) 내 마약류 검색 시스템 구축·운영					대검, 우본, 관세
5)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 도입					대검
6) 첨단 증거분석 프로그램 도입					대검
7) 약물운전(운항)자에 대한 마약류 검사 근거규정 마련					경찰, 해경
8) 소변 유효성 검사법 개발·활용					대검
2.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7개}					
1) 온라인 수사팀 신설·운영					경찰
2) 위장수사 제도 마련					경찰, 대검
3)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대검, 식약
4) 가상자산 전문가 분석 지원을 통한 수사역량 강화					경찰
5) 가상자산 추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대검
6) 마약류 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					대검
7) 마약류 범죄 관련 보상금 지급 확대					대검
3. 밀수 차단을 위한 국경단속 및 국제공조 확대^{8개}					
1) 첨단 통관감시 장비 확대					관세
2) 대형화물 검색을 위한 컨테이너 검사센터 구축					관세
3) 국제우편물에 대한 AI 기술 도입·활용					관세
4) 수중드론 등을 통한 선저검색 확대					해경
5) 주요 마약류 유입국에 검찰 마약수사관 파견					대검
6) 인터폴 'MAYAG' 합동 공조작전 등 추진					경찰

과제명 (85개)	추진 일정				소관 부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7) 국가간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회의체 역할 확대					대검, 해경
8) '오리온 캠페인' 현지 훈련 참여					해경

4.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5개}

1) 과거 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 확대					식약
2) 의사 셀프처방 금지 대상 확대					식약
3) 식욕억제제에 대한 제조·수입량 배정					식약
4)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투약이력 간편 확인					식약
5) 마약청정 대한민국 내 의료용 마약류 정보센터 개설					식약

[전략2] 마약류 중독자 일상 회복 지원^{16개}

1. 중독치료·재활기관에 대한 접근성 제고^{5개}

1) 전국 ^{함께} 한걸음센터에서 방문상담 실시					식약
2) 24시간 전화상담을 통해 집중관리 대상 발굴·연계					식약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개소 확대					복지
4) 숙식형 한걸음센터 설치에 대한 타당성 연구 실시					식약
5)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기준 완화					복지

2. 중독치료·재활 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3개}

1) 치료보호 종료 이후 재활기관으로 연계 강화					복지
2) 재활기관 인프라 효율적으로 연계					식약, 복지
3) 사회재활 이후 주기적 사후관리 위한 매뉴얼 마련					식약

3. 중독치료·재활 서비스 내실화^{4개}

1) 수가 시범사업 계획안 마련					복지
2)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복지
3) 가족 기능 회복 지원프로그램 전국 확대					식약
4) 예방·재활 전문인력 양성 확대					식약

4. 마약류 사범에 대한 중독관리 강화^{4개}

1) 투약사범에 대한 '사범-치료-재활 연계모델' 적용 확대					식약, 대검 법무, 복지
2)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약물검사 및 심리상담 확대					법무

과제명 (85개)	* 기본계획 189개 과제	추진 일정				소관 부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3) 추가치료 필요한 출소자에 대한 치료보호기관 연계						복지, 법무
4) 전담교정시설 출소 이후 <small>함께</small> 한걸음센터로 연계 강화						법무

[전략3]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 기반 강화^{13개}

1. 마약류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확대^{3개}

1) 대학교 내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 운영 확대						식약
2) 지역 대표 축제·행사 등 계기시 대국민 캠페인 진행						식약
3) 대국민 캠페인 영상 제작						문체

2. 대상별 예방교육 강화^{3개}

1)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확대						식약
2) 교원용 교육 표준지도서 개발·보급						교육
3)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식약

3. 데이터·현장 중심 대책을 위한 기반 강화^{4개}

1)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식약
2) 마약류 하수역학 조사방식 개선						식약
3) 국내 처벌규정 정합성 조사·정비						식약
4) 암페타민 계열에 대한 신속 검사키트 개발						식약

4. 정책 거버넌스 및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3개}

1) 마약류대책협의회에 부처 및 지자체 참석 확대						국조, 식약
2) 예방·홍보 및 사회재활 관련 표준조례 개정(안) 마련						국조, 식약
3) 국제마약퇴치 지원사업 실시(몽골·키르기스스탄)						대검, 경찰

[전략4] 위험 취약요인별 맞춤형 관리 강화^{28개}

1. 펜타닐 등 합성마약에 대한 대응 강화^{12개}

1) 국제기구 등과 정보협력을 통한 국제동향 상시 파악						대검, 관세 식약, 국과수
2) 국내 유입 우려 성분에 대한 표준품 선제 확보						식약, 국과수
3) 임시마약류 구분 및 지정기한 폐지						식약
4) 200여종 마약류 동시 분석기술 개발						식약

과제명 (85개)	추진 일정				소관 부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5) 마약류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에 AI 기술 접목, 신종 마약류 탐색·예측에 활용					국과수
6)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핸드캐리 수하물 및 신변 전수검사 실시 (주요 마약류 유입국發 여행자)					관세
7) 국내 마약제조 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					대검
8) 수요 예측량 사전에 산출, 제조·수입 배정량 통제					식약
9) 오남용 우려 기관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					대검, 경찰, 식약
10) 미성년자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 마련					식약
11) 불법마약류(합성마약류 포함)에 대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개발					식약
12) 합성마약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식약, 대검

2. 취약대상별 선제적 예방관리^{16개}

1) (청년) 온라인 플랫폼 내 불법·유해정보 상시 점검·대응					식약, 여가, 대검
2) (청년)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중독상담 실시					식약
3) (청년) 청소년 재활 프로그램 전국 확대 운영					식약
4) (청년) 치료·재활 이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관리					여가, 식약
5) (청년) 청소년용 VR 콘텐츠 개발·활용					식약
6) (청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마약류 예방교육					여가
7) (청년) 대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식약, 교육
8) (청년) 집단연수 행사시 마약류 중독예방 교육 권고					교육
9) (외국인) 사증심사 필수 제출서류에 대한 위변조 검증 강화					법무
10) (외국인)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입국금지기간 상향					법무
11) (외국인) 사증발급시 마약 예방교육 이수 권고					법무
12) (외국인) 다국어 안내자료 제작·배포					법무, 교육 고용, 식약
13) (외국인) 유학생 조기적응프로그램에 예방교육 신설					법무
14) (수용자) 모든 수용자 대상 물질중독예방교육 실시					법무
15) (군인) 병역·입영판정검사 대상자 마약류 검사					병무
16) (군인) 임관 및 장기복무 지원 간부 마약류 검사					국방